



주간통일정세 2013-14(2013.04.01~04.0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3-1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인민보안부장에 최부일 임명 확인(4/1, 노동신문)**
 - 북한이 최부일 전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을 인민보안부장(우리의 경찰 청장)에 임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일 전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자 4면에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보선된 노동당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의 프로필을 공개, 최부일이 "2013년 2월부터 인민보안부장으로 사임했다"고 밝힘.
 - 함경북도 회령이 고향인 최부일은 1944년생으로,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업 후 군단 참모장,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군단장,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을 역임한 전형적인 군인 출신임.

- **北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사진 돌연 취소 눈길(4/2, 조선중앙통신; 조선통신사)**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날 송고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회의 사진을 이례적으로 모두 취소한다고 밝혀 그 배경이 궁금증을 낳고 있음.
 - 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조선통신사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와 관련하여 1일 전송한 사진을 모두 취소합니다"라고 밝혔고 구체적인 취소 이유는 언급하지 않음.
 - 조선통신사 측도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힘.

- **北, 박봉주 새 내각에 실무형 관료 중용(4/2, 노동신문)**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개혁파 경제관료로 알려진 박봉주를 내각 총리로 재기용하고 장관급 인물도 대거 교체하면서 새 내각 진용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가 2일 전함.
 -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2일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회의 소식을 보도하면서 "일부 내각 성원을 해임 및 임명했다"고 밝히고 새로 임명된 리무영, 리철만, 강영수, 배학, 리혁, 리춘삼, 김경준, 강하국, 태형철 등 9명의 내각 상(장관급)을 소개함.
 - 이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리무영 부총리 겸 화학공업상이며, 1948년생으로 박봉주 총리보다 9년 아래인 리무영은 박봉주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당 책임비서로 재직할 당시 이 기업 현장 기사장을 지냄.



- **北 김정은 "핵포기 중동국, 침략의 희생물로 전락"(4/2, 노동신문)**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몰락 사례 등을 연상시키는 '중동국기들의 교훈'을 직접 거론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전함.
 - 신문은 1, 2면을 할애해 김 제1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보고내용 전체를 2일 게재함.
 - 김 제1위원장은 이 보고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강조하며 "대국들을 쳐다보면서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이겨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했다가 중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발칸반도와 중동지역 나라들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함.

- **北, 기자동맹 대표자회 12년 만에 개최(4/3, 노동신문)**
 - 북한 언론인들의 사상교양단체인 조선기자동맹 대표자회가 2일 평양 인민대학습당에 열렸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일 전함.
 - 조선기자동맹이 전국 규모의 회의를 연 것은 2001년 11월 개최한 조선기자동맹 제8차 대회 이후 12년 만임.
 - 신문은 "대표자회에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출판·보도·무력부문의 기관, 각도·직할시 동맹대표회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참가했다"고 밝힘.

■ **김정은동향**

- 4/1, 김정은 黨 제1비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 지원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4.1, 중방)
- 4/2,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인지(女)에게 '100살 생일상' 전달(4.2, 중통·중방)
- 4/4, 김정은 黨 제1비서(4.11),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4.13) 1돌 즈음 중앙사진전람회 개막식, 4.4 양형섭·김용진(내각부총리) 등 참가하 평양대극장에서 진행(4.4, 중통)
- 4/7, 김정은 黨 제1비서, 금수산태양군전을 꾸리는데 기여한 '류경능라식당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4.7,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 4.1 김정은 참가下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4.1, 중통·중방·중앙TV)
 - ① 사회주의헌법 일부 수정보충, ② 금수산태양궁전법, ③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화할데 대한 법령, ④ 우주개발법, ⑤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움에 대한 결정, ⑥ 내각의 2012년 사업 정형과 2013년 과업 대하여, ⑦ 201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13년 예산에 대하여, ⑧ 조직문제 채택
 - 박봉주 → 내각총리, 최영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으로서 선거/김정각·리명수 → 국방위 위원에서 해임, 김격식·최부일 → 국방위 위원으로 보선/태형철 → 상임위 서기장에서 해임, 홍선옥 → 상임위 서기장으로 선거
 - 리무영(내각부총리 겸 화학공업상), 리철만(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강영수(도시경영상), 배학(원유공업상), 리혁(수산상), 리춘삼(국가자원개발상), 김경준(국토환경보호상), 강하국(보건상), 태형철(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임명
 - 김영남, 최룡해, 박봉주, 최영림, 장성택, 김경희, 현영철, 김격식, 김기남,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이용무, 강석주, 오극렬, 현철해, 김원홍,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주규창, 김창섭, 로두철, 최부일, 리병삼, 조연준, 태종수, 김정각, 리명수, 김영대, 류미영 등 참석
 -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 4.1 인민극장에서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4.1, 중통)
- 김정은(黨 제1 비서)의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제시·채택 '黨 중앙총 2013년 3월 전원회의 보고·결론' 전문 보도(4.2, 중통·중방·노동신문)
 - 현시기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임.
 - 모든 일꾼-당원-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승리의 신심 드높이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함.
 -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으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며 김일성 父자의 '병진노선 제시-계승발전' 칭송(4.2, 중통)
 - 신은후(임업성 부상)·김철호(대성구역 黨委 부장)과 한우길·천기철(노동자)·김창영(군관) 등, '병진노선 지지 및 관철의지' 반향(4.2, 평방·중방·중통)

나. 군사

- 北 "올해 국방예산, 지출총액의 16%"...작년比 0.2%p ↑ (4/2,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이 올해 예산의 국방비 비중을 2005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늘



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최광진 북한 재정상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의 12기 7차회의에서 "국가 예산에서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해 적들과 전면대결전을 벌려나갈 수 있도록 지출 총액의 16%를 국방비로 돌린다"고 밝혔지만, 신문은 올해 국방예산 총액은 밝히지 않음.

● **北 김정은, 지난달 군수공업회의서 포탄생산 강화 지시(4/6,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5일 공개한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주체102 2013.3 전편' 기록영화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달 17일 군수공업부문 일꾼협의회를 지도했다고 밝힘.
- 김 제1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신속하면서도 불의적인 타격으로 적들의 군사요충지와 반동 통치기관을 쳐부수 버려야 한다"며 포 무기와 포탄 생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함.
- 그는 "포와 포탄의 질을 철저히 보장해야 적 대상물에 대한 선제타격과 불의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지금 적들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고 있는 조건에서 신뢰성 있는 포무기와 포탄을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함.

다. 사회·문화

● **北, 새 학제에 맞춘 2013학년도 시작(4/1, 조선중앙통신)**

- 작년 공표된 새 학제에 맞춘 북한의 2013~2014학년도가 1일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전함.
-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늘 전국 각지 학교에서 새 학년도가 시작된다"고 전함.
- 엄대성 내각 교육위원회 부국장은 중앙방송과 인터뷰에서 "오늘 온 나라의 보통교육 부문과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교수 교양을 위한 물질·기술적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새 학년도 첫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함.

● **北, 국제축구학교 설립... "외국인도 유학 가능"(4/4, 조선일총연합회)**

- '체육강국 건설'을 강조하는 북한이 평양 국제축구학교를 설립하고 이달 중 개교할 예정이라고 재일본 조선일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4일 전함.
- 신문은 "세계적 수준의 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평양 국제축구학교가 설립됐다"며 "능라도 지구에 세워진 평양 국제축구학교는 4월 중으로 개교식을 갖게 된다"고 밝힘.
- 또 "평양 국제축구학교 학제는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돼 있다"라며 "학교에서는 적성체질의(재능 있는) 청소년을 선발하여 전문 축구교육과 훈련을 주게 된다"고 소개함.



- **北, 생활문화 사업 독려…"일터와 가정 꾸미자"(4/7,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된 상황에서 "봄철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을 위한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셔야 한다"고 문화사업을 독려함.
 - 신문은 이날 1면에 게재한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에 적극 떨쳐나서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오늘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이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안고 거리와 마을, 일터와 가정을 훌륭하게 꾸리며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기타 (대내 사회 · 문화)

-北 각지에서 4.1 2013년 새학년도 시작(4.1, 중통)/올해부터 중학생은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나뉘며 소학교의 5년제는 다음해부터 실시

2. 대외관계

가. 일반

- **한반도 긴장 속 국제사회 대북 지원 이어져(4/2, 자유아시아방송(RFA))**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일 전함.
 -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이 올해 북한에서 620만 달러(약 69억원) 규모의 식수 및 위생 사업 등을 벌인다고 전함.
 - SIDA는 북한 주민들의 질병과 사망의 주요 원인이 식수 오염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식수 공급 시설 개보수와 위생시설 보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기초 의약품도 제공함.
- **北, 중국 주요 도시 직항노선 개설 잇달아(4/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고려항공이 상하이, 난징(南京) 등 중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직항로를 잇달아 개설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4일 전함.
 - 고려항공은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난징과 평양 사이 직항 노선을 임시 개통하고, 상하이-평양 직항도 이달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운항할 예정이며, 두 노선은 모두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두 차례 운행된다고 함.
- **유엔 세계식량계획 3월 대북지원, 전월대비 35% 감소(4/4,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지난 3월 대북 식량 지원규모가 전월보다 35%가량 줄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전함.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 약 17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대북지원 모금 부진으로 이같이 식량지원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고 밝힘.
 - 그는 곡물 확보가 늦어지면서 3월에 제공하려던 식량을 나누어 4월까지 지원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소개함.
- **북-중 경협 상징 신압록강대교 건설 순항(4/4, 연합뉴스)**
 - 최근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속에서도 중국과 북한 간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신압록강대교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함.
 - 랴오닝성 단둥(丹東)의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도 신압록강대교 양쪽 강변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각종 공정이 중단없이 추진되고 있음.
 -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현수교 형태의 신압록강대교는 중국 측이 총 사업비 22억2천만 위안(약 3천900억원)을 전액 부담하고 구조물의 안전성과 공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신기술을 총동원해 건설하고 있음.
 - **北, 해킹 피해 사이트 차단...해킹 트위터 계정 방치(4/5, 연합뉴스)**
 - 북한이 국제해커 집단 '어나너머스'(Anonymous)에 해킹을 당한 사이트에 대해 차단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5일 전함.
 - 오전 9시 현재 해킹 피해를 본 우리민족끼리, 반제민족민주전선, 우리민족강당 등 대남선전용 사이트와 고려항공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함.
 - **일본, 독자적 대북 제재 2년 연장(종합)(4/5, 연합뉴스)**
 - 일본은 5일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해오던 제재를 2년 더 연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이날 각의에서 오는 13일로 시효가 만료되는 북한 선박 입항금지,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등의 제재를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
 - **北, '외국공관 철수 권고' 언급 없어(4/5,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지난 5일 평양 주재 외국공관과 북한에 상주사무소를 두고 인도적 지원 활동을 벌이는 유엔 기구들에 이달 10일 이후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직원 철수를 위해 필요한 북한의 지원을 알려달라고 통보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이 같은 권고를 러시아와 중국에는 별도로 전했고, 다른 외국공관과 유엔 기구에는 공동 브리핑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이나 매체들은 6일 오전 10시 현재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음.
 -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이 지난달 26일 내놓은 외무성 성명과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지난 1일과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문건으로 각각 배포했다고 전함.

나. 6자회담(북핵)

● 북한 3차 핵실험 '재료', 끝내 판명 못할 듯(4/1, 워싱턴포스트(WP))

- 북한이 지난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우리나라와 플루토늄 중 어떤 핵물질을 썼는지에 대한 판단이 결국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 워싱턴포스트가 1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핵물질 분석가들이 이 판단을 뒷받침할 충분한 물리적 근거를 찾는 데 실패했음을 인정함.
- 북한의 핵실험 직후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120여 개 관측소를 총동원해 핵실험 때문에 생겼을 방사성 물질의 흔적을 찾으려 시도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함.

● 北, 핵무기 법령에서 '핵확산 방지'도 언급(4/2, 연합뉴스)

- 북한이 법령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면서도 국제적 현안인 '핵확산 방지' 문제를 언급해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2일 전함.
- 북한의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과 대외용 평양방송은 2일 북한이 전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라는 법령의 전체 내용을 공개함.
- 우선 북한이 최근 한미군사훈련에 반발해 '핵선제 타격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이 법령에서는 핵무기가 방어용이라고 주장함.

● 北 ICBM 시험발사 징후 속 中 국경지대 경계태세 강화(4/2, 워싱턴프리버컨(WFB))

-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부대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북한 국경지대에 군사적 대응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김정은의 오판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워싱턴프리버컨(WFB)은 1일(현지시간) 전함.
- 북한 미사일 기지의 위성화면을 분석하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이동식 중거리 미사일 부대를 포함한 미사일 부대들에 대해 전시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미국의 보수성향 WFB는 1일(현지시간) 전함.
- WFB는 또 "북한의 중거리 노동미사일들과 이동 발사대들의 모습이 위성 영상에 포착됐다"면서 "북한이 곧 신형 KN-08 이동식 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 무수단 이동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 北 "영변 핵시설 재가동"...핵무기 생산의지 천명(종합3보)(4/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5MW급 흑연감속로를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선언, 6자회담 합의 파기와 핵무기 생산 의지를 공개 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2일 전함.
- 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기자와의 문답에서 핵시설들의 용도를 조절 변경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우리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함께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했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 따라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발전시키는 조치의 하나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지체없이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고 강조함.

● 北 "첨단핵타격 작전 최종비준...백악관에 정식통보"(종합)(4/4, 연합뉴스)

-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 "우리의 최고사령부가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대로 강력한 군사적인 실전 대응조치들을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함.
- 북한은 이날 발표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미군의 B-52, B-2 전략폭격기와 F-22 전투기, 핵잠수함, 구축함 등이 참가한 것을 비난하면서 이같이 주장함.
- 담화는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분별 없는 핵위협은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된 우리 식의 첨단 핵타격 수단으로 여지없이 짓부셔버리게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우리 핵무력의 무자비한 작전이 최종적으로 검토·비준된 상태에 있음을 정식으로 백악관과 펜타곤에 통고한다"고 밝힘.

● 北 노동신문 "핵보유로 경제건설에 자금 집중 가능"(4/5, 노동신문)

-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해 경제건설에 자금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전함.
- 노동신문은 이날 '새로운 병진노선 따라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자' 제목의 사설에서 "조국이 핵보유국이 된 오늘 우리에게는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자금과 노력을 총집중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됐다"고 밝힘.
-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한미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 수단을 확보한 만큼 경제발전에 가용 자금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기타 (6자회담 북핵)
 - 北대표, 4.1 유엔 군축총 회의 연설에서 現 한반도 정세는 '미국의 對北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 및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인민군대는 핵무력의 경상적인 전투준비태세 완비" 등 천명(4.6, 중 통)
 - 北 '외무성·軍최고사령부 성명', 4.1·4.2 '유엔 안보리 공식 문건 S-2013-194호·S-2013-196호'로 배포(4.5, 중방·중통)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무력과사용 '군사 카드' 다시 준비(4/4, 연합뉴스)
 - 북한이 '폭력적인 언사'로 대남·대미 위협 공세를 펼친 데 이어 실제 군사 도발단계로 진입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함.
 - 5mw(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를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 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음.
 -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포함한 군사도발에 대비 해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 하기 위한 고(高)고도방어체계(THAAD)를 꺾에 긴급 투입할 계획임.

나. 경제·사회·문화

- 개성공단 근로자들, 北 폐쇄 위협에 긴장 속 출경(종합)(4/1, 연합뉴스)
 -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위협이 나온 가운데 1일 오전 우리 측 입주기업 들의 개성공단 출경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연합뉴스가 1일 전함.
 - 그러나 근로자들은 이전과 달리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함.
 -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출·입경 승인을 우회 통보함.
- 개성공단 통행금지 속 근로자 3명 첫 귀환(4/3,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공단 출경을 불허한 3일 오전 11시 50분께 근로자 3명이 처 음 귀환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함.
 - 이들은 차량 3대에 나눠 타고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로 돌아옴.
 - 이들은 CIQ에서 별도의 입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이용, 곧바로 게이트를 통과함.



- **北대남매체 "개성공단 덕 보는 것은 南기업" 주장(4/4, 우리민족끼리TV)**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TV'는 4일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와 관련, "개성공업지구에서 덕을 보는 것은 우리(북한)가 아니라 괴뢰 패당과 남조선 영세기업가들"이라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TV는 "우리가 전시상황 속에서도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남조선 중소기업들의 생계가 달렸고 여기에 연관된 많은 남조선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임.
 - 이 웹사이트는 "남조선 보수 언론과 반북 대결분자들이 개성공업지구에 대해 망발을 하고 있다"며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자까지 나서서 북한도 개성공단의 경제적 이익이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악담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함.

- **北 "못된 말 계속하면 개성공단 北 근로자 철수" 위협(4/4, 연합뉴스)**
 - 북한은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와 관련, "남조선 괴뢰패당과 보수언론이 못된 입질을 계속하면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북한)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개성공단에 들어와 있는 남조선 인원을 북침전쟁의 인질로 삼으려는 것은 다름 아닌 괴뢰 패당"이라며 이같이 밝힘.
 - 대변인은 "괴뢰 보수패당과 어용언론은 우리가 개성공단을 어찌지 못할 것이라는 고약한 나발(헛소리)을 계속 불어댔다"라며 "우리 군대는 그에 대처해 개성공단에 대한 남조선 인원의 통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함.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영변 5MW 흑연감속로 재가동하겠다">(4/2, 연합뉴스)

- 북한은 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에 따라 영변의 5MW급 흑연감속로를 정비해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현존 핵시설들이 용도를 병진노선에 맞게 조절변경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우리나라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함께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하였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2일 전했다.
- 대변인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 따라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발전시키는 조치의 하나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지체없이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007년 6자 회담 '2·13합의'와 '10·3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이번 조치는 이들 합의를 깨는 것임.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면 북한은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게 됨.
- 북한은 '2·13합의'와 '10·3합의'에 따라 5MW급 원자로와 핵재처리시설, 핵연료공장 등에 대한 폐쇄 및 봉인조치를 취했으나 6자회담이 진전되지 않고 주변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이 이뤄지지 않자 2008년 9월 봉인을 해제했으며 2009년 11월에는 8천개의 사용 후 연료봉을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대변인은 "우리 원자력부문 앞에는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푸는 데 적극 이바지하며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 북한은 지난달 31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과업 중 하나로 '자립적 핵동력공업 발전 및 경수로 개발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 <한미 6자 수석대표 회동..북핵 현안 협의>(4/2, 연합뉴스)

-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6자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일



(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 협의했음. 두 사람은 지난 2월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평가하고 공동 대처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음.

- 정부 소식통은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첫 회담을 갖기에 앞서 조율해야 할 핵심사안을 사전 정리하는 성격이 짙다"면서 "한미 양국은 서울에서 다시 열릴 외교장관회담, 그리고 5월초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해 대북 정책에 대한 양국의 공동대응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한미 양국은 특히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북한의 정전협정 탈퇴 및 남북 불가침합의 파기 선언 등으로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같은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는 전철을 밟지 않으면서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도발로는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면 다양한 외교적 수단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음.
- 본부장은 또 조셉 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과도 만났음. 1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한 윤병세 장관은 2일 오후 국무부에서 케리 국무장관과 만나 5월 초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양자 현안, 북한·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함. 특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점이 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 대해서도 큰 틀의 방향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 <北, 외국공관 철수 권고...전쟁위협 확산 노린 듯>(4/5, 연합뉴스)

- 북한이 5일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들의 직원 철수를 권고한 배경에 관심이 쏠림.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이날 평양에 있는 러시아 및 중국 대사관을 비롯한 외국 공관들에 직원 철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이 아직 공식매체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이려는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 통상 한 국가가 자국 주재 외국 외교관들에게 철수를 권고하는 행위는 전쟁 등 극도로 위협해지는 상황을 가정한 조치이기 때문임.
- 북한은 지난달 26일 전략미사일 부대와 야전 포병군에게 '1호전투근무 태세'를 지시하며 전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고 최근에는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로 인식돼온 개성공단의 남측 인원 진입을 차단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위협을 고조하고 있음.
- 특히, 이날 외국 공관에 대한 철수를 권고한 것은 그동안 남한과 미국에 집중해왔던 전쟁 위협을 국제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임. 북한의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 CNN방송 등 외국 언론이 분쟁지역



전문기자를 남한에 파견하는 등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는 상황임.

- 덴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협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과 관련, 한국 직원들을 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외국 공관들에 철수를 권고한 것은 북한에게 있어 한반도 긴장이 국제적 이슈라는 점을 확실히 부각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이번 조치만으로 북한이 전면전을 상정한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
- 북한의 김도준 조선관광총국장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4월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여행철에 대비해 중국 관광객을 많이 보내달라는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에 힘쓰는 상황에서 대규모 전쟁을 감행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일(현지시간) 지하 갱도에 주둔하며 '전투태세'에 들어간 북한 군인들이 이달 들어 내무반으로 복귀하기 시작했다고 하며 북한이 내부적으로 공격 메시지를 완화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 <“북한, 동해안에 미사일 2기 이동…시험발사일 것”>(4/5, 연합뉴스)

- 북한이 동해안으로 이동시킨 탄도미사일은 2기이며, 발사대와 연료 탱크도 함께 이동시키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미국의 복수 관리들 말을 인용, 4일(미국 시간) 보도했음. 미 관리는 이날 기밀 영상과 감청 내용 등을 토대로 "북한 측이 이동식 탄도미사일을 며칠 아니면 몇 주 내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CNN은 전했다.
- 또 다른 관리는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떤 경우든 시험 발사일 것"이라며 북측이 아직 한 차례도 시험발사한 적이 없는 무수단 미사일 시험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추정했음.
- 지난 2007년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처음 공개된 무수단 미사일은 옛 소련의 미사일 시스템에 토대를 둔 개량 중거리 미사일로, 2010년 10월 노동당 창건 65주년 군사행진 때도 모습을 드러냈음.
- 길이 12~18.9m, 지름 1.5~2m에 사거리가 3천~4천km에 달해 미국령 괌까지 타격 가능하며, 현재 50기가 실전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CNN은 그러나 이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 동남아까지는 타격 가능하지만 괌에 배치된 미군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했음.

나. 미·북 관계

● <미국 "북한, 위협으로 대화 안돼..기회 있다">(4/2,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이 전쟁 위협을 계속하는 한 대화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외교의 창'은 계속 열려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음.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전



시상황' 선언에 대해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백악관에 밝혔듯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전 세계 평화 및 안보에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음.

- 놀런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런 위협과 도발에 직면해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방어를 위해 흔들림없는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존 케리 국무장관의 동북아 방문 계획을 소개하며 "모든 방문국에서 북한의 도발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
- 놀런드 대변인은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 "전에도 말했지만 북한은 이런 종류의 위협으로는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지 못한다"면서 "이는 북한을 반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음.
- 그는 "북한은 자신들의 미래에 관심을 두고 도발을 중단하고, 잘못된 곳에 돈을 쓰는 것을 멈추고,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그들이 옳은 일을 한다면 외교의 기회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회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 그는 또 태국 정부 등이 서울주재 대사관에 자국민 대피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한 것과 비슷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정기적으로 모든 대사관의 비상절차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음. 이어 놀런드 대변인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케리 장관의 순방기간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이밖에 "내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지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한국 쪽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음.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 방어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독수리(FE) 연습과 같은 훈련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그는 F-22 스텔스 전투기(일명 랩터) 2대는 사전 계획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려 일본 카테나 공군기지에서 오산 공군기지로 이전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훈련의 초점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동맹에 미국의 방어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리틀 대변인도 놀런드 대변인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호전적이고 무책임한 언사를 동원해 도발 행위를 지속할지, 평화의 길을 갈지 선택해야 한다"며 "지금은 북한이 차로를 바꿀 때다. 북한은 건설적인 역할을 선택해야 한다. 그게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건설적으로 행동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한다면 미국과 핵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를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있다고 덧붙였다.

● <북한, 미군 그림 과녁삼은 사격훈련 영상 공개>(4/2, 연합뉴스)

- 북한이 미군 모습의 그림을 과녁에 붙여놓고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고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이 신문은 또



"북 측은 북한군의 사격훈련 장면을 찍은 이 영상을 국영 TV를 통해 내 보냈다"면서 "이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전시상황 돌입 운운하며 위협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 이 영상은 북한군들이 '미제에게 죽음을'이라는 글이 쓰인 과녁을 향해 총탄 세례를 퍼붓고, 'USA'라고 쓰인 철모를 쓴 미군 그림을 오려붙인 과녁 곳곳에 총탄 구멍이 나있는 모습을 담고 있음. 더 선은 "이 동영상은 독재자 김정은의 북한이 공개한 도발적인 영상물 중 가장 최신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은 그간 한미 양국이 진행해온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도발적인 언동을 서슴지 않았음. 북한은 특히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와 '핵 무력'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을 새 전략노선으로 채택했음.
- 회의를 첫 주재한 김정은 제1비서는 "핵은 민족의 생명이며 통일조선의 국보"라며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음.

● <北, 중거리미사일 동해안 이동…美, 꺾에 요격체계 투입>(4/4, 연합뉴스)

- 북한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미사일을 동해안으로 이동시키고 미국이 꺾에 미사일 요격체계를 긴급 투입키로 했음. 북수의 정부 소식통은 4일 "북한이 중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동해안으로 이동시킨 정황이 한미 정보 당국에 포착됐다"면서 "현재까지 정보 분석 결과 이 물체는 '무수단'급 중거리미사일로 보인다"고 밝혔음.
- 소식통은 "이 미사일에 탄두가 장착됐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면서 "북한이 실제 발사하기 위해 옮겼는지, 무력시위 또는 대미 위협 차원에서 이동시켰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기차를 이용해 이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 한 번도 시험발사한 적이 없는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 3천~4천km로 꺾까지 타격할 수 있음. 지난 2009년 기준으로 50발을 실전 배치했으며 길이 12~18.9m, 지름 1.5~2m임. 지난 2010년 10월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군사퍼레이드에서 처음 공개됐음.
-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김일성 생일(4월15일)을 전후로 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정보자산을 가동해 미사일 동향을 정밀 추적 중임.
- 일본 아사히신문도 이날 한미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신형 장거리미사일 KN-08로 보이는 물체를 동해 쪽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음.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이 시작되기 전에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 이달까지 항행 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꺾에 투입하기로 했음. 미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성명



에서 "몇 주일 내에 THAAD를 꺾에 배치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밝혔다.

- THAAD는 고도 150km에서 초속 2.5km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2005년부터 실전에 배치됐음. 트럭 탑재 발사대와 요격 미사일, AN/TPY-2 추적레이더, 통합 사격통제시스템 등으로 구성
- 미 국방부는 "미국 정부는 북한 지도부에 대해 도발적 위협을 중단하고 국제의무를 준수함으로써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경계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영토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

● <北 "첨단핵타격 작전 최종비준...백악관에 정식통보">(4/4, 연합뉴스)

- 북한은 4일 미국을 겨냥해 "우리의 최고사령부가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대로 강력한 군사적인 실전 대응조치들을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음. 북한은 이날 발표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미군의 B-52, B-2 전략폭격기와 F-22 전투기, 핵잠수함, 구축함 등이 참가한 것을 비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음.
- 담화는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분별 없는 핵위협은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된 우리 식의 첨단 핵타격 수단으로 여지없이 짓부셔버리게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작전이 최종적으로 검토·비준된 상태에 있음을 정식으로 백악관과 펜타곤에 통고한다"고 밝혔음.
- 담화는 이어 "이명박 역도의 전철을 밟고 있는 남조선의 현 괴뢰당국자들과 군부 강패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벌써 우리의 경고신호를 보낸 상태"라고 말했음. 또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황에 대한 책임은 '백악관의 미행정부와 펜타곤 군부 호전광들에게 있다면서 "조성된 정세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말겠는가 아니라 오늘 당장인가 아니면 내일인가 하는 폭발 전야의 분분초초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음.
- 담화는 "정의를 사랑하고 양심을 귀중히 여기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주도한 미국과 그에 맹종한 나라들의 수치스러운 처사를 규탄하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두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미국은 조성된 엄중한 사태 앞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음.
- 담화의 이 같은 내용은 북한군은 언제든지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대미 위협수위를 또다시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됨. 앞서 북한은 지난달 말 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전략미사일 부대와 장거리포병 부대를 포함한 모든 야전 포병군을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킨다고 발표했으며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에서는 "남북관계가 전시상황에 들어간다"고 선언한 바 있음.



● <미국, 대북 군사력 과시전략 역효과 우려에 속도조절>(4/4, 연합뉴스)

- 북한의 도발에 맞서 첨단 무기를 한반도 인근에 투입하며 군사력을 과시해 온 미국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음. 군사력을 과시해 경솔한 행동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전략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핵잠수함 샤이엔(Cheyenne)과 스텔스 전투기 F-22 등을 잇달아 투입해온 미국이 군사력 과시 전략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음.
- 북한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반발하거나 군사적 행동과 같은 의도치 않은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임. 미국 관계자들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예측 불가능한 캐릭터라는 점에 주목했음.
-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이라서 공격 가능성이 적다는 정보 당국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임. 북한이 당장 군사적 행동을 취하려는 계획은 없어 보이지만 방심한 틈에 성급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음.
- 미사일 구축함 2척을 한반도 해역으로 이동시켰다는 관련 보도가 나온 것도 전략 변화를 부추긴 것으로 보임. WSJ에 따르면 백악관과 미국 국방부는 구축함 이동 사실을 아직은 알릴 계획이 없었음.
- 미국은 철저한 각본에 따라 첨단 무기 이동 사실을 하나씩 밝혀왔는데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미사일 구축함 이동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진 것임. 그동안 미국은 북한에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한국 정부에 미국이 버티고 있으니 북한의 위협에 군사적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과시하는 전략을 택해왔음.
- WSJ는 이런 전략이 정보 당국의 철저한 분석과 계획에 따라 이뤄졌고, 지금까지는 북한도 예상했던 반응을 보여왔다고 설명. 하지만 구축함 이동 관련 내용이 뜻하지 않게 노출된 것임. 미국 측 관계자들은 구축함 이동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악관이 의도했던 것보다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더 악화했다고 분석
-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 시험 운항이라며 서둘러 해명에 나선 것도 이런 분석에 따라 긴장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됨. WSJ는 군사력 과시 전략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정보 당국에서 생각보다 북한을 더 압박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북한의 태도를 정확히 가늠하기 전까지 다음 단계 시행을 잠시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캠벨 "김정은, 미국 대화 제의 전부 거부했다">(4/4, 연합뉴스)

- 미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이런저런 방법으로 대화 의사를 타진했지만 전부 실패했다고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말했다.



- 캠퐀 전 차관보는 4일자 요미우리(讀賣)신문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미국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지는 진지한 의사를 전달해온 일은 없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고 밝혔음.
 - 그는 북한이 영변원자로 재가동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비핵화 협상의) 큰 후퇴로 앞으로 생산적인 외교를 부활시키는 게 어렵게 됐다"고 말해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등의 재개가 곤란해졌다는 인식을 표명했음.
 - 캠퐀 전 차관보는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군 동원 등의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선전의 측면이 있으며 전쟁 준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위기를 회피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대북 융화정책의 실패를 받아들여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 그는 한미일 대응에 대해서는 "핵문제를 놔두고 경제대화를 하면 북한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게 될지 모른다"면서 "현실적으로는 (개성공단 등) 남북간에 남아있는 최후의 경제교류를 축소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는 한국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음.
- <미국 유엔대사 "北에 평화해법 이익 일깨우는데 관심">(4/6, 연합뉴스)
- 북한 지도부가 미국과 동맹국이 가진 인내력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 핵위협에 대처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수전 리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음.
 - 리스 대사는 5일(현지시간) 미국 NBC와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에게 평화적 (해결)대안이 가져다줄 이익을 일깨우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라며 이같이 말했음.
 - 이어 김정은이 앞으로 또 다른 도발적 언사를 하더라도 미국과 동맹국들은 과민반응하지 않고, 필요시 스스로를 방어할 자위(自衛) 능력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음. 한반도 긴장 완화와 관련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리스 대사는 중국에서 협의한 대로 대북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더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음.
 - 그는 중국이 "과거와 달리 김정은(정권)이 너무 나가고 있다는 시각에 상당히 기울어 있다"며, 북한의 그런 태도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경제와 안보 측면 모두에서 중국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음을 중국측에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다. 중·북 관계

- <중국 지린성, 투먼 북한공단 국가급 승격 추진>(4/2, 연합뉴스)
- 중국 지린(吉林)성이 북한과 접경한 투먼(圖門)시에 조성한 '조선(북한)공업원구'를 국가급 단지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연변일보가 2일 전했다. 신문은 지린성이 최근 발표한 '중국 동북지역에서 동북아시아를



- 향한 개방계획 요강 (2012~2020년) 실시 의견에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됐으며 이는 조선공업원구를 지방정부 차원이 아닌 국가 대 국가 간 합작대상으로 격상하는 전략이라고 소개했음.
- 중국에서 유일하게 북한 노동력 고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이 공단은 북한과 철도, 도로로 연결된 투먼시의 경제개발구 내에 1km² 규모로 조성됐음. 현재 전자, 의류 등 3개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먼시는 올해 안에 10개사를 추가로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음. 또 2015년까지 3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 이 공단의 총생산액을 10억위안(약 1천750억 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임.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구와 마주한 투먼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지난해 9월에는 철도로 연결된 북한 청진항 3, 4호 부두를 북한 측과 30년간 공동 관리·이용하는 계약을 맺고 열차와 선박을 통한 중국 내륙 화물의 육·해 복합운송을 추진 중임.
 - 두만강 유역의 북한 접경인 투먼과 훈춘(琿春)에는 지난해부터 북한 인력 도입이 본격화해 현재 의류 생산과 정보기술(IT) 등의 분야에서 300여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北 ICBM 시험발사 징후 속 中 국경지대 경계태세 강화>(4/2, 연합뉴스)
-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부대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북한 국경지대에 군사적 대응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김정은의 오판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음.
 - 미국의 보수성향 군사전문매체 워싱턴프리비컨(WFB)은 1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기지의 위성화면을 분석하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이동식 중단거리 미사일 부대를 포함한 미사일 부대들에 대해 전시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 WFB는 또 "북한의 중거리 노동미사일들과 이동 발사대들의 모습이 위성 영상에 포착됐다"면서 "북한이 곧 신형 KN-08 이동식 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 무수단 이동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KN-08 미사일은 사거리가 5천km 이상이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급 신형 미사일로 추정되고 있고,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가 3천~4천km임.
 - 북한 미사일 부대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이 한미연합 독수리(FE) 연습에 전략폭격기 B-52와 6천900t급 핵잠수함 사이엔에 이어 지난주 B-2 스텔스 전략핵폭격기까지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 앞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지난달 29일 '전략미사일 부대의 화력타격 임무에 관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 군 전략로켓부대에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김정은은 특히 B-2 폭격기의 한반도 진입에 대해 "핵전쟁을 일으키겠다



는 최후통첩"이라며 "미 본토와 히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 안의 미제 침략군 기지들,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도록 사격 대기 상태에 들어가라"고 지시했음.

-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정찰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영상·신호 첩보기를 24시간 가동해 북한 전역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TFL)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이와 함께 중국은 북한과 인접한 동북부 지역에서 군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잦은 전투기 비행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WFB가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 보도
- 지난달 19일자 정보 보고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에 최고의 경계태세인 '1호 경계령'이 하달됐음을 시사하고 있음. 지린성의 지안현 거리에는 전투준비태세 지령을 받은 많은 군인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탱크와 장갑차 등 인민해방군 제190 기계화 보병여단 소속 중화기들이 압록강 쪽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WFB는 "중국은 북한이 최근 전시 상황 돌입을 선언하고 한미 양국을 향해 미사일 공격 위협을 가한 뒤 긴장이 고조되자 지난달 중순 이후 북한과의 국경 지대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서 "지린성과 허베이성, 랴오닝성의 여러 국경도시에서 저공 군용기들의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고 전했다.
- 중국 해군도 한반도 인근 서해에서 군함을 동원해 실전 포격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는 4월 말까지 지속될 한미 간 독수리 훈련에 반발하는 북한을 지원하려는 것처럼 보임. 미국 관리들은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난민들이 대거 자국으로 몰려오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중국 상무부 부부장 "나선 경제특구 낙관적">(4/2, 연합뉴스)

- 중국 상무부의 천젠(陳健) 부부장은 2일 북중 간 나선 경제특구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밝혔음. 천 부부장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중국-동북아 박람회 브리핑을 통해 "나선 특구에서 여러 가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그는 "나선 경제특구는 북중 양국 협력 아래서 인민의 생계를 위한 사업으로 북한에 경제적 발전이라는 혜택을 줄 것"이라며 "이는 정상적인 프로젝트이고 발전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이런 발언은 중국이 지난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지지하면서도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나온 것임.
- 중국의 한 관리는 지난해 나선 경제특구를 '북한의 선전'이라고 비유한 바 있음. 선전은 개혁개방 30여 년 동안 중국의 부흥을 이끈 최대 수출 지역으로 통합. 브리핑에는 천웨이건(陳偉根) 지린(吉林)성 부성장도 참석했음. 한편, 중국과 북한은 2011년 나선,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건설에 합의하고 두 곳에 관리위원회를 설립해 공동 개발을 추진 중임.



- <북중, 고위급 대화 재개 모색... '기싸움' 치열>(4/3,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작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중단된 고위급 대화의 재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양국의 견해차가 워낙 커 논의 의제는 물론, 회동 장소 등을 놓고도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지는 것으로 관측됨.
 - 3일 중국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3차 핵실험 직전부터 북한과 중국은 부부장급 이상 고위 당국자 간 대화 가능성을 수차례 타진했음. 특히, 핵실험을 저지하려는 중국이 적극적인 입장이었음.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당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북한에 보내 핵실험 반대 견해를 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미온적 반응 탓에 성사되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았음.
 - 최근에는 이와 달리 북한이 적극적으로 고위급 대화 재개를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음. 실제로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크게 악화한 북중 관계는 부분적이거나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작년 말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연하장을 받고도 답장을 보내지 않은 것과 달리 지난달 시진핑의 국가주석 취임 축전을 보낸 것이 대표적 사례임. 이와 더불어 한동안 중국과 관련한 일체의 뉴스를 내보내지 않던 북한 언론도 다시 중국의 동정을 보도하기 시작했음.
 - 그러나 북한의 몸짓과 달리 중국은 계속 세관, 출입국, 교통 등 각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 고위급 대화가 다시 추진되더라도 현재로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고수를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비핵화 포기, 6자회담 사멸을 주장한 데 이어 원자로 가동 재개 방침까지 밝혀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음.
 - 중국의 처지에서는 평양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도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됨. 반대로 북한도 중국에 고위급 인사를 보내면 중국으로부터 '잘못된 행동'에 대한 야단을 맞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음. 이런 탓에 중국과 북한이 서로 고위급 회동 장소를 안마당으로 고집하면서 대화 추진이 첫 단계부터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옴.
 -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과 중국 사이에 서로 고위급 인사를 보내라는 얘기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서로 감정의 상처도 있고 해서 실바 싸움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라. 일·북 관계

- <일본 "북한 도발적 언동 극히 유감">(4/4,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동해쪽에 이동시켰다는 보도와 관련, 4일 기자회견



견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은 알고 있으며 도발적인 언동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스가 장관은 "북한의 언동에 휘둘리는 일 없이 관계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미국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괌에 고성능 요격 미사일을 배치한 데 대해 "미국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본, 북한미사일 요격태세 발령>(4/7, 연합뉴스)

-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7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파괴조치명령'을 발동, 자위대에 미사일 방위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고 일본언론들이 보도했음.
- 이에 따라 자위대는 일단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을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동해에 투입,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공, 영해로 날아올 경우 요격에 나설 수 있게 됨.
- 자위대법에 근거해 파괴조치명령이 발령된 것은 이번이 4번째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 예고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의 발령은 처음임. 일본은 지금까지 2009년 3월, 2012년 3월과 12월 등 세차례에 걸쳐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했으나 세번 모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며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이후에 취해졌음.
- 일본정부는 이번에 북한이 발사 정식 예고는 하지 않았지만 미사일을 동해쪽으로 이동 배치함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했음.
- 이전의 파괴조치명령때와는 달리 총리와 관계 각료가 참석하는 안전보장회의 개최없이 발령을 결정했음. 그러나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전개는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음.
-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후쿠오카(福岡)시 강연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면서 "만반의 태세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 러·북 관계

● <러시아 남북한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 거듭 경고>(4/3, 연합뉴스)

- 러시아가 3일(현지시간) 한반도 긴장 상황이 우발적으로 남북한 간의 무력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이고리 모르쿨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남북한 중) 어느 쪽이든 의도적으로 군사행동을 개시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긴장된 분위기에서는 사람의 아주 사소한 실수나 기술적 문제만으로도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 위기의 정점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지적
- 한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러시아 6자회담 차석대사(북핵담당 특임대



사)도 하루 전 "우리는 어느 한 편이 의도적으로 전투행위를 개시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상황을 무너트릴 수 있는 비의도적 충돌 위험은 높다"며 남북한 간의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을 우려했음.

- 그는 "현 상황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누가 옳고 그른가의 논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 시나리오를 허용하지 않고 사태를 정치-외교적 틀 안에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

● <러시아, 北 핵보유국 지위 강화 노력 강하게 비난>(4/4, 연합뉴스)

- 러시아가 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강화 노력을 비난하면서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해 관련국들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음. 알렉산드르 루카셰비치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월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핵보유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최고인민회의가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한데 대해 주목한다"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강화 노력에 우려를 표시했음.
- 루카셰비치는 북한의 이같은 조치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재개 전망이 아주 복잡해졌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음.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 비준국인 러시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에 대한 이같은 도전적 무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강화 노력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임.
- 루카셰비치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강국 지위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우리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
- 루카셰비치 대변인은 이어 "동북아 정세를 안정화하는 길은 호전적 수사나 군사적 활동 강화가 아니라 상황을 정치-외교적 틀 내에 유지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변함없이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해 가까운 이웃국가들은 물론 미국과 다른 일련의 파트너 국가들과도 폭넓은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위험한 수사를 가능한 빨리 중단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틀인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바. 기 타

● <한반도 긴장 속 국제사회 대북 지원 이어져>(4/2, 연합뉴스)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고 있음.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이 올해 북한에서 620만 달러(약 69억 원) 규모의 식수 및 위생 사업 등을 벌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전했다.
- SIDA는 북한 주민들의 질병과 사망의 주요 원인이 식수 오염에서 비롯



된다고 판단하고 식수 공급 시설 개보수와 위생시설 보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기초 의약품도 제공함.

- 스웨덴 정부는 2000년대 후반까지 대북 식량지원에 주력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식수 등 보건 분야에 지원의 중점을 두고 있음. 미국의 한인단체인 '크로스선교회'도 올해 2월 하순 컨테이너 한 개 규모의 의약품을 배편으로 북한에 보냈다고 RFA가 소개했음.
- 이 단체는 지난해 8월 방북했을 때 만난 북한 당국자들이 의약품 지원을 요청해 작년에만 2천만 달러(약 223억원) 상당의 항생제와 피부연고제, 고혈압약 등을 보냈으며 생필품이나 긴급식량도 지원하고 있음. 선교회 관계자는 지난해 홍수 피해를 본 지역에 2천만 달러 어치의 생필품과 의약품을 보냈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북한 핵능력, 이란에 훨씬 앞선다>(WSJ)<(4/2, 연합뉴스)>

-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이란을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아시아판이 2일 보도했음. WSJ는 미국 관리들과 국제 핵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양국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전체 6개 항목 가운데 4개 항목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이란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 북한이 우위를 보인 4개 항목은 △핵무기를 미사일 탄두로 만들 수 있는지 △실제로 핵실험을 했는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는지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지임.
- 중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성공했는지와 우리늄 농축 능력 등 나머지 2개 항목에서는 북한과 이란이 비슷한 능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음. WSJ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은 10여 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에 근접했다"고 평가하고 "이는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음.
- 반면 이란은 아직 핵실험을 거치지 않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음.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버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4~5년 안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과 결합된 핵전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아시아의 안보 구도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고 말했음.
-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전날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원심분리 기술에서는 북한이 이란에 상당히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음. 미국은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해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란 핵 문제에 외교력과 군사력을 집중해온 게 사실임.
-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데다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북한의 동맹인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가급적 피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는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분석.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이란과 북한 간의 핵개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음. WSJ는 전날 이란이 북한의 핵탄두를 사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고, 같은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이란에 핵연료 농축 기술을 전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북한의 핵문제가 이란보다 위협적이라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놓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전문가들의 진단은 엇갈리는 분위기. WSJ에 따르면 데이비드 애셔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자문관은 핵무기 비확산을 위해 "이란에 그동안 쏟았던 압력의 3분의 1 정도만 북한에 가했어도 엄청난 전략적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애셔 전 자문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라는 고강도 압박카드를 제시했던 인물. 이는 미국이 새로운 대북 경제 제재에 나서고 핵심 전략무기를 한반도에서 선보이는 흐름과 맞물려 대북 압박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는 조짐으로 읽힐 수 있음.
 - 이에 비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북한에게 기존의 통념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식의 대응태도보다는 긴장완화에 초점을 맞춘 접근태도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임. 대등한 핵전력을 바탕으로 상호확증파괴(MAD)를 막기 위해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존의 관념이 북한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임.
 -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브루킹스 연구소 세미나에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분쟁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떠들기만 할뿐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음.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들을지, 아니면 추가 행동을 강행할지 지켜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 <“북한, 영변핵시설 폐쇄-경제지원 맞교환 시도했다”>(4/4,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몇년 동안 영변 핵시설 폐쇄와 경제적 지원을 맞교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과 한국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미국의 핵문제 전문가가 밝혔음.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P)에 기고한 미국 핵전문가 조엘 위트의 글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
 - 비핵화문제를 담당하는 미 국무부 관리로 근무한 뒤 현재 뉴욕 콜럼비아 대학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위트는 2일 FP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여러 차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영변 핵시설의 연료봉을 넘겨주는 대가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이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 위트는 영변 원자로의 운명이 자신이 참여한 미국 대표단과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의 주요 주제가 됐었다며 이같이 밝혔음. 여러 차례에 걸쳐 영변 핵시설을 방문한 바 있는 위트는 현재 영변 핵시설에는 8천 개의



핵연료봉이 있으며 이는 핵탄두 8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평가했음.

- 위트는 "2010년 11월 평양에서 진행된 비공식 접촉에서 북한 외무성 고위 관리가 영변 원자로 가동에 이용될 수 있는 수천 개의 핵연료봉을 폐기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었다"며 "물론 북한은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고 그 보상은 핵연료봉의 가치보다 더 큰 것이었다"고 소개했음.
- 그는 "북한이 같은 제안을 2011년 3월 베를린, 같은 해 말 평양에서 있었던 접촉에서도 반복했다"며 "이 같은 북한의 제안은 매번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정보기관 등을 위한 브리핑 자료로 오바마 행정부에 보고됐다"고 전했음. 그는 영변 핵시설 폐쇄에 관심이 컸던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정부도 이 제안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 위트는 그러나 미국 관리들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쇄할 수 있는 기회였던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 그는 일부 미국 관리들은 영변 핵시설이 낡았고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며 다른 관리들은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는 것보다 2010년 말 공개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전했음.
- 또 다른 관리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충실히 따르면서 북한이 개혁의지를 보이거나 악의적 행동을 중단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그는 소개했음.
- 위트는 결국 이 과정에서 협상의 기회가 사라졌고 지난해 8월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비공식 접촉을 했을 때 북한 당국의 태도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고 전했음.

● <러시아 외무 "외교관 철수 北 제안 더 검토해야">(4/5,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이 5일(현지시간) 평양 주재 외국 공관에 직원 철수를 권고한 것과 관련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는 아직 북한 측의 제안일 뿐이며 러시아는 상황을 더 분석한 뒤 철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중앙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외교관 철수 제안은 평양에 있는 모든 공관에 전달됐다"며 "우리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음.
- 그는 "북한의 이웃 국가들에 이 상황과 관련한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며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브로프는 "한반도 긴장 고조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는 있지만 아직은 (행동이 아닌) 말 수준"이라며 "(북한이 외교관 철수를 권고한) 결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소개
- 그는 "이 문제에는 여러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요인을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분명히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측에 외국 공관 직원 철수 권고가 '제안'인지 아니면 '결정'인지를 문의했으며 북한 측은 '제안'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음.



- 한편,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레오니트 칼리슈니코프는 북한 외무성의 외국 공관 직원 철수 제안은 임박한 전쟁 징후가 아니라고 해석했음. 그는 "이는 북한 측이 군사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온 수사(修辭)의 연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스텔스전투기 F-22 2대도 한미연합훈련 투입>(4/1, 연합뉴스)
 -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2대가 한미 독수리(FE) 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지난달 31일 한국을 방문했다고 주한미군사령부가 1일 밝혔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위협 공세에 따라 확장억제력 제공 공약을 위해 B-52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사이언(6천900t급), B-2(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에 F-22 전투기를 한국에 전개했음.
 - 일본 오키나와 가테나 공군 기지에서 오산기지로 전개한 F-22는 적의 레이더망을 회피하는 스텔스 성능을 가졌음. 최대속력 마하 2.5 이상으로 작전행동반경은 2천177km에 달함. 최대 250km 떨어진 적의 위치와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어 '미니 AWACS(조기경보기)'로 평가되는 APG-77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음.
 - AIM-120(암람) 공대공미사일 6발, 450kg급 공대지 정밀유도무기 2발, AIM-9(사이드와인더) 공대공미사일 2발 등으로 무장하고 있음. F-22 전투기는 지난 2010년 7월 한미 연합공군훈련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음.
 - 미국 국방부는 오는 2일 F-22 전투기를 한국 언론에 공개하려던 계획을 갑자기 취소,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앞서 미국 언론은 미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F-22가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위해 31일 한국에 도착했다고 보도
- <한미, 北핵위기 3단계 대응 어떻게 이뤄지나>(4/1, 연합뉴스)
 - 한미가 북한의 핵무기 위협 유형을 3단계로 구분해 억제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국방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한미 공조 아래 북한의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한미는 북한의 핵위기 상황 유형을 △ 핵위협 단계 △ 사용임박 단계 △ 사용 단계 등으로 구분해 구체적인 타격 전략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략은 오는 7월 초에 완성되고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연습 때 적용한 뒤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는 일정으로 마련되고 있음.
 - 이는 양국이 작년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SCM에서 2014년까지 완성키로 합의한 일정을 1년 앞당긴 것임. 제3차 지하핵실험 등 북한의 핵위



- 협이 현실화됐다는 양국의 엄중한 상황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3단계별 구체적인 억제 전략은 양국이 작년부터 수행해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결과가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임.
- 양국은 작년부터 미국의 핵 연구시설인 로스앨러모스연구소에서 TTX를 진행했음. 잠수함을 이용한 핵무기 발사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발사, 항공기를 이용한 핵무기 투하 등 북한의 공격 가능한 유형을 상정해 그에 적합한 타격무기 등을 산출해 내는 방식으로 연습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양국은 이 연습을 통해 북한의 핵위기 상황 유형별로 기본적인 타격 수단을 시뮬레이션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북한이 1단계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 국제정치·경제·외교적인 압박 수단을 모두 동원하되 의지를 꺾지 않으면 군사적 대응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됨.
 - 이때 군사적 대응 수단은 우선 우리 육·해·공군의 중·장거리미사일이 검토됨. 육군 유도탄사령부의 사거리 300km와 500km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현재 개발 중인 800km 탄도미사일 등이 해당됨. 미국 측에서는 사거리 2천km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을 동원할 것으로 보임. 군사적 무력시위를 통해 북한의 핵 사용 의지를 꺾는 것이 기본 전략
 - 북한이 1단계를 넘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를 명확히 드러내면 2단계로 돌입. 2단계에서는 '선제타격'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임. 우리 군은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뚜렷해지면 '선제타격'으로 해당 시설을 사전에 무력화할 것이란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선제타격은 자위권 차원"이라면서 "상대방이 핵을 쏘겠다고 하는 데 가만히 앉아서 맞을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승조 합참의장도 지난달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는 임박한 징후가 있으면 선제타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선제타격에 동원될 수 있는 무기는 육군의 탄도미사일과, 해군의 사거리 1천km이상의 함대지 순항미사일(해성-2)과 잠대지 순항미사일(해성-3) 등이 꼽힘. 해성-2는 한국형 구축함(KDX-II·4천400t급)과 이지스 구축함(7천600t급)에 탑재되는 무기. 해성-3은 214급(1천800t급) 잠수함에서 발사해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게 됨. 공군 F-15K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260km의 '타우러스'급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선제타격에 동원될 수 있는 무기.
 - 마지막으로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하는 단계.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해당 발사 기지 상공에서 요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후방지역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 공해상에서 충분히 요격할 수 있음. 군은 앞으로 사거리 160km의 SM-3 요격미사일을 이지스함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도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발사하면 이지스함 요격체계뿐 아니라 미사일방어(MD) 계



획에 따른 공중 요격체계를 가동할 것으로 보임.

-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상 핵위협 단계별로 적용 가능한 억제전략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 한편, 북한은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하는 등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음.

● <“미군 구축함-해상레이더 한반도 인근 투입”>(4/2, 연합뉴스)

- 미국 해군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 구축함과 해상 레이더 기지를 잇따라 한반도 인근 해역에 투입한 것으로 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CNN방송은 이날 긴급뉴스를 통해 미국 해군이 탄도미사일 탐지 전용 레이더인 'SBX-1'(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을 북한과 더 가까운 해역으로 이동 배치 중이라고 보도했음.
- CNN은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 새로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SBX-1은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일부로 대형 시추선 크기의 선박 위에 거대한 레이더돔을 설치한 탐지 시설. CNN은 SBX-1의 이동 배치는 북한이 도발 위협 수위를 올리는 데 따른 미국 해군의 첫 대응 조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미군은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이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하자 하와이에 있던 SBX-1을 필리핀 인근 해역으로 파견한 바 있으며, 현재 SBX-1이 어느 지역에서 이동해 배치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이와 함께 미국 해군이 미사일장착 구축함인 '매케인호'(USS McCain)를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미국 NBC방송이 보도
- 북수의 국방부 당국자는 매케인호가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앞두고 이 지역에 투입된 적이 있다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케인호의 이동이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또 한미 독수리(FE)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던 또다른 미국 해군 미사일 구축함 '피츠제럴드호'도 일본의 모항으로 되돌아가는 대신 한반도 남서쪽 해상으로 향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피츠제럴드호의 이동이 "유사시에 강화된 미사일 방어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신중한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 <미국 USTR "한국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압박 지속">(4/2,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위한 압박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발간한 '2013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과학적 근거, 국제수역사무국



- (OIE) 지침,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등에 기반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고서는 또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미국은 한국에 총 5억8천200만 달러 어치의 쇠고기 및 관련 제품을 수출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전 세계 4위 시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 이어 보고서는 지난해 3월 정식 발효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자동차 부문 등에서 공정경쟁과 시장접근성이 확대됐다"면서 서비스금융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등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 또 '산업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을 지목한 뒤 "여전히 정부 소유이지만 상업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대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적재산권보호' 분야에서는 "한국에는 대체로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이 갖춰져 있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해적행위,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무단사용, 대학 내 서적 불법복사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합법적인 사용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 올해 USTR 보고서에서 정보기술(IT) 서비스와 관련된 언급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금융부문에서 금융정보처리의 국외위탁을 막고 있는 한국의 규제가 외국 금융업체들로 하여금 한국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견해를 보였다. 온라인상 거래 때 고객 개인정보를 국외에 저장하지 못하게 하는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 고해상도 지리정보를 국외에 저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발의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하는 데 대해서도 보고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 특히 USTR 보고서는 한국 국방부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소프트웨어 사용료 분쟁이 발생한 데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상당량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국 편향적 입장을 보였다.
 - '의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련업체들이 (한국의) 가격 결정 및 보험급여의 투명성 부족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샘플화장품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자동차안전기준(KMVSS), 휴대전화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 규정, 투자관련 규제 등에 대해 미국 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를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규정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지난해 한국에 수출된 미국산 자동차가 2011년보다 50% 증가했다고 추산했다.

● <한·미 외교장관 회담, 북핵동맹 현안 협의>(4/3,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오후 워



싱턴DC 국무부에서 만나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와 한미 동맹 발전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음. 5월 상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정부 간 정책협력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음.

- 양국 외교장관은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북한의 정전 협정 탈퇴 및 남북 불가침합의 파기 선언, 영변 핵실험 재가동 발표 등으로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북한에 대한 정책을 포함한 한반도 정책의 기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윤 장관은 또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의미를 설명하고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북미 관계 등이 선순환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남북 간 신뢰조성 차원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으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케리 장관도 북한의 도발에도 한반도 방위 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음.
- 현지 소식통은 "현재의 긴장국면 이후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북한의 앞으로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이어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국은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음. 양국 외교장관은 이와 함께 현안인 원자력협정 개정과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큰 틀의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윤 장관은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 톰 도널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만날 예정이다. 헤이글 국방장관과 한반도 방위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됨.

● <헤이글 "한국 방어·확장역지 의지 공고">(4/4, 연합뉴스)

-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동맹에 대한 의지는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 헤이글 장관은 이날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국에 대한 방어 및 확장역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지 리틀 미국 국방부 대변인과 외교부가 전했다.
- 헤이글 장관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경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면서 "시퀘스터(미국의 자동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준비태세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 장관과 헤이글 장관은 2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면서 최근 한미 양국이 서명한 '공동 국지 도발 대비계획'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두 장관은 특히 굳건한 한미공조를 통한 대북 역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앞으로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등을 통해 양국 외교·국방 당국 간 긴밀히 협력키로 했음.
- 리틀 대변인은 "두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요성을 논의했다"면서 "헤이글 장관은 외교적 노력이 북한을 평화의 길로 유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 윤 장관은 이어 백악관에서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과 30분간 면담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5월 미국 방문, 북한·북핵 문제, 한미동맹 등의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그는 도닐런 보좌관에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구상을 설명했음.
- 이에 대해 도닐런 보좌관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은 단순히 수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도닐런 보좌관과의 면담에 앞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및 싱크탱크 인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와 한반도 정세 등을 설명했다.
-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는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 보좌관 등이 참석했음. 한미 외교장관회담차 미국을 방문한 윤 장관은 5일 오후 귀국할 예정임.

● <美, 한국의 핵 비확산 의지에 의구심>(4/4, 연합뉴스)

- 한미 양국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의 핵 비확산 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비확산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확산법 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 한국과학기술원은 4일 외교부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 '포스트 후쿠시마시대 한국원자력외교의 도전과 과제'에서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개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확산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음.
- 나아가 "미국의 일부 원자력정책 전문가들은 한국의 비확산에 대한 의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한국이 비확산 체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 보고서는 "이런 생각은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서 한국의 농축, 재처리 기술허용 등과 같은 이슈에 미국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음.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보는 이유로 "원자력 개발과 상업화 노력에 적절한 비확산 정책 강화가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핵주권론과 같은 무분별한 민족주의적 핵보유 개발 논리도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 2004년의 소위 '남핵(南核) 파동'과 함께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과 북한의 핵개발 등의 상황도 우리나라의 비확산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분석.보고서는 그러면서 미국이 예외적으로 재처리·농축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해준 일본을 참고사례로 제시했음.
 - 보고서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기울인 장기간의 다각적인 노력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일본은 최초의 원폭 피해국으로 반핵 정서가 강할 뿐 아니라 정부가 비확산 의지를 천명하고 실제 핵물질을 엄격히 통제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음.
 - 이어 "일본은 미국에 대해 정부, 학계, 산업계 등의 전방위적인 외교력을 동원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히 일본은 원자력협정 개정시 이미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단계에 있었다"고 평가했음.
 - 보고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평가절하돼 있는 한국의 비확산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면서 "비확산법 제정이 국내 비확산 문화 정립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이어 △ 확산저항성이 큰 원자력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동참 △ 국제 핵안보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이행 △ 원자력 외교 전담인력 및 조직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 <커틀러 USTR대표보 "한국 TPP협상 참여는 당연·타당">(4/4, 연합뉴스)
-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3일(현지시간)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타당한 일"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음. 그는 이날 워드로 윌슨센터와 한국의 동아시아 재단이 공동개최한 '한국과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TPP 협상이 미국을 비롯해 1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몇년간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음.
 - 커틀러 대표보는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등의 시장에 접근할 기회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
 - 이날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 김기환 주미한국대사관 경제공사는 "한국정부도 TPP 협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음. 김 공사는 "한국은 이미 미국과 높은 차원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렵지 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음.



나. 한·중 관계

- <靑 "한중일 정상회의 中 연기요청 없어…일정 조율중">(4/4, 연합뉴스)
 - 청와대는 오는 5월 우리나라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중국이 한국에 회의 연기를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연기 요청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르다. 조율을 더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일정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결정이 통보되지 않아 조율하면서 아직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수석은 "정상회담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 정리를 해야 하며 3개국이 다 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 합의가 아직 안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 그는 정상회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3개국이 합의를 해야 하는데 조율이 잘 되면 (5월에) 하는 것이고 아니면 조금 늦출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조율 중이며 5월에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혔음. 주 수석은 "회의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
 - 또 다른 외교라인 관계자는 "세 나라가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며 "중국이 연기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 언제 하는 것이 좋다고 확정적인 답이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 한중일 3국은 2008년부터 매년 정상회의를 열고 있음. 2008년 12월 후쿠오카, 2009년 10월 베이징, 2010년 5월 제주, 2011년 5월 도쿄, 지난해 5월 베이징까지 5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회의가 열릴 차례임.

다. 한·일 관계

- <日, 또 '독도 일본 땅' 주장…정부, 日공사 불러 강력 항의>(4/6, 조선일보)
 - 일본 정부가 외교정책 연례 보고서인 '외교청서(外交靑書)'를 통해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5일 발표한 '2013 외교청서'를 통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
 - 특히 이번 외교청서는 작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다케시마에 상륙한 것과 관련, 한국에 항의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음.
 -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일·한 분쟁 해결 교환 공문에 근거한 조정 실시를 한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고도 했다.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각의 결정한다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음.

- 한편, 외교부는 이날 오전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招致)해 이 같은 입장을 일본 측에 전했다.

라. 미·중 관계

● <케리-양제츠 전화통화...한반도 정세 논의>(4/4, 연합뉴스)

- 북한의 잇따른 도발적 인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4일 전화통화를 했음.
-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 국무위원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케리 장관에게 설명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미국과 북한 등 관련국들이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는 가운데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라는 주장을 펴고 있음.
- 케리 장관은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감행하지 않도록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을 것으로 관측됨. 아울러 케리 장관과 양 부장은 중미 양자 관계와 관련한 대화도 나눴음. 케리 장관은 "중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며 "조만간 계획된 나의 방중이 성과를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12~15일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3국을 방문할 예정

● <한반도 위기 속 미·중 '미사일 방어' 신경전>(4/4, 연합뉴스)

- 한반도 긴장국면의 한복판에서 동북아 역내질서를 할거하는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단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미국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위협을 '억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MD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는 형국임.
- 미국이 대북 억제를 핑계 삼아 중국을 견제·봉쇄하고, 나아가 동북아 역내의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포석이라는 의구심이 짙게 깔렸음. 한동안 잠잠하던 MD 이슈가 한반도 위기를 고리로 G2(미·중)간 역내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는 휘발성 높은 '뇌관'이 되는 흐름
- 미국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최첨단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인 고고도 방어체계(THAAD)를 수주일 내에 괌 기지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는 게 국방부의 공식 설명. 실제로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을 바라보는 오바마 행정부의 인식은 전례없이 비상(非常)해 보임.
-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공식 발표 전 워싱턴DC 국방대학 강연에서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협(real and clear danger)"이라고 규정했음. 헤이글 장관의 이런 표현은 과거 전쟁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미국에 있어 특별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



- 헤이글 장관은 특히 "북한은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토인 괌과 하와이, 그리고 서부해안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위기감을 표출했음. 특히, 이번에 배치된 고고도방어체계(사거리 200km, 요격고도 150km)는 하층 방어체계인 패트리엇 PAC-3(사거리 15~45km, 요격고도 10~15km)의 요격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평가됨.
- 그러나 미국의 이번 괌기지 MD 배치는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라는 큰 틀에서 이미 '예고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음.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부터 추진해온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과 직결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것임. 이는 이라크·아프간전 등 중동에 쏟았던 대외전략의 초점을 아시아로 다시 옮기는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을 의미
-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MD 체제의 강화를 천명한 데 이어 지난달 18일 서부 해안의 MD 전력을 50% 늘리는 안을 승인했음. 특히, 이란 미사일에 대비한 유럽 MD 계획 일부를 축소하면서 서부해안 MD를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음. 중동의 '이란 위협' 방어에 투입될 예산을 동북아의 '북한 위협' 방어로 돌린 것임.
- 이처럼 갈수록 구체화하는 미국의 MD 강화 움직임에 중국으로서는 긴장하는 표정이 뚜렷함. 미국의 MD 시스템을 바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일종의 군사적 '포위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미국이 MD를 고리로 삼아 한-미-일 3각 동맹체제를 가일층 공고화할 것이라는 베이징의 우려가 크다는 분석
- 나아가 미국의 MD 시스템이 표면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게 중국 측의 강한 의구심임. MD 체제의 강화는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무기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 요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 지난달 18일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방어용 MD 구축을 서두르는 데 대해 "MD 배치 강화는 대립만 가중시킬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 세계 및 지역의 전략적 균형 및 안정에 관련된 것"이라고 비판했음.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유럽지역 MD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됨. 이번 괌기지 MD 배치에 대해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불쾌감을 표출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임.
-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MD 구축 강화가 중국에 대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지 못하면 미국이 역내에서의 군사력을 증강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옴. MD를 둘러싼 미·중의 신경전이 한반도 위기상황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



- <중국, 개별유도식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4/4, 연합뉴스)
 - 중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진행 중인 개별유도식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개발이 성공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만간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중국 군사 전문 사이트 전첨망이 4일 전했다.
 - 전첨망은 이날 러시아 군사공업종합체신문망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개별유도식 다탄두 미사일이란 1개의 미사일에 각각 자체 소형 엔진과 유도체제를 갖춘 탄두를 여러 개 장착한 미사일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 각 탄두가 미사일에서 분리된 이후 자체 엔진과 유도체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날아갈 수 있어 요격이 매우 어려워지며 이에 따라 미사일 방어체제를 돌파할 수 있다고 전첨망은 설명했다.
 - 중국은 이런 탄두를 이미 실전 배치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동풍(東風) 31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개별유도식 다탄두 미사일을 제작할 예정이다. 전첨망은 중국이 원거리 공격 능력 향상을 위해 최근 신형 핵 잠수함에 사정 8천km의 탄도미사일을 장착했다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 홍콩 문화보(文匯報)도 빅토르 예신 전 러시아 전략 미사일 부대 사령관이 최근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중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한편, 예신 전 사령관은 신형 핵 잠수함의 미사일 시험이 진행 중이며 잠수함이 이미 근해에서 임무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마. 미·일 관계

- <미-일, 공군기지 반환시점 발표>(4/6, 월스트리트저널)
 -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주민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북한 및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키나와 기지는 아시아의 핵심 미군기지 역할을 하고 있음.
 - 5일(금요일) 아베 신조 총리는 외무상 및 방위상, 주일 미국대사가 함께 한 자리에서 미군이 사용중인 부지 일부를 오키나와현에 반환하는 협정에 서명. 이번 부지는 빠르게는 올해 중 반환될 예정이다.
 - 양국은 주민반발이 심한 후텐마 공군기지를 이르게는 2022년에 반환하는 등 더 많은 부지를 반환하기 위한 시점도 제시. 기지를 이전할 장소가 정해져야 한다는 조건이 따름. 미국과 일본정부는 부지 반환시점 제시를 통해 오키나와 지방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기지를 오키나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음.
 - 주일 미군시설 중 75%를 차지하는 오키나와 기지는 한반도 긴장과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일 안보동맹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지난 일요일 미군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무력과시 목적으



- 로 F-22 스텔스전투기를 오키나와 가테나 공군기지에서 한국으로 출동시켰음.
- 척 헤이글 미국방장관은 미일 양국이 이번 협정을 통해 "아시아에서 미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업적을 이룩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협정이 "오키나와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양국의 강력한 의지를 시사한다"고 발언했음.
 - 아베 총리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민반발이 심한 기지이전계획에서 진전을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음. 전임 총리들은 오키나와현이 너무 큰 부담을 짊어지고 있으며 후텐마 기지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바 있음.
 -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센터의 대니얼 스나이더 부소장은 "아베 총리는 전임자들과는 달리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지적. 영토와 시설 반환은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협정의 일부임. 본 협정은 해병 9,000명을 오키나와에서 철수시키는 새로운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나,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계획에 대한 주민반발을 완화시키지 못했음.
 - 3월 일본정부는 기지이전 후보지역에서 매립작업을 개시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나카이마 히로카즈 오키나와현 지사에 제출했음. 반대자들은 공군기지를 건설할 경우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주 초 기지이전계획을 반대하는 자민당 소속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나카이마 지사와 회동했음. 나카이마 지사는 신청서를 8~10개월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음.
 - 금요일 나카이마 지사는 부지를 일부 반환하는 이번 협정이 오키나와현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환영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광범위한 기지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주민희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보도했음. 한편, 미국은 관련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시설 4개가 위치한 부지(0.65 km²)를 오키나와현에 반환할 예정. 8.41 km²에 달하는 나머지 부지 반환은 공군기지 이전 결정에 달려있음.

바. 미·러 관계

- <푸틴-오바마, 6월 G8정상회의서 별도 회담>(4/5,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북아일랜드에서 열릴 주요8개국(G8)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양자회담을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는 이날 기지들에게 "북아일랜드에서 러-미 양국 정상 회담이 예정돼 있다"며 "회담이 내용 있고 충분한 시간 동안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이루어지면 기쁘겠지만, 현재로서는 양국 대통령이 북아일랜드에서 반드시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합의



했다"고 덧붙였음. 6월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방러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 것임.

사. 중·일 관계

● <중국 해양국장 "다오위다오 순항 상시화" 강조>(4/1, 연합뉴스)

- 중국 국가해양국의 류즈구이(劉賜貴) 국장이 일본과의 분쟁 지역인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순항을 상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일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류 국장은 중국 해양권의 보호강화를 위해 다오위다오 해역에 대한 (중국 선박의) 권한 유지 순항을 상시화하는 한편 필리핀과의 영토분쟁 지역인 황엔다오(스카보러 섬)를 굳게 지키고 서해(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정상 순항 및 법 집행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류 국장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국의 권한과 조직이 확대된 만큼 과거 비효율적이고 느슨했던 해양 법 집행 업무를 쇄신, 해양권의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이 해양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역설했음.
- 이런 가운데 중국 해양 감시선은 3척은 이날 역시 센카쿠 12해리 해역에서 활동하면서 해당 해역에 있던 일본 선박에 "중국 영해에서 즉시 나가라"고 경고하기도 했음. 중국은 더욱 힘이 커진 해양국 조직을 활용, 센카쿠 등 분쟁지역에서 실효적인 지배력을 높여 상대국이 다시 주도권을 잡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세를 강화한다는 방침

● <“후쿠다 전 총리, 시진핑 주석과 회담 조율중”>(4/3, 연합뉴스)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일본 총리가 오는 6~8일 중국 하이난(海南)성에서 열리는 '보아오(博鳌) 아시아포럼'때 동석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정중이라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음.
-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측은 총리 재임때 중국 중시의 입장을 취했던 후쿠다씨의 이번 방중을 기대하고 있으며 회담은 6일 또는 7일 갖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중임.
- 두 사람의 회담이 성사되면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대립으로 냉각된 중일 관계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어떤 인식을 표명할지가 주목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 이와 관련해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특사로 조기 방중을 검토하고 있어 중일간 고위급 인사 교류가 부활되지 않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음.

아. 일·러 관계

● <일·러 내주 외무장관 회담...정상회담 의제 조율>(4/4,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 장관이 다음 주 영국 런던에서 열릴 G8(주요 8개국) 회담에서 별도로 단독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특히 양국 간 해묵은 갈등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섬 4곳의 반환 문제와 관련한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기대됨. 쿠릴열도 문제는 아베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계획이 알려지면서부터 주요 논제로 꼽혀왔음.
 -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먼저 외무장관 회담으로 협상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쿠릴열도는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 조약을 근거로 시코탄, 하보마이 등 남부 섬 4곳에 대해 꾸준히 영유권을 주장해왔음.
 - 특히 2차대전 이후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 전제조건으로 쿠릴열도 반환을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국제법 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으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국은 지금까지 평화조약을 맺지 못하고 있음.
 - 다만 푸틴 대통령이 최근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 특사와의 만남에서 양국 간 평화조약 부재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언급 하는 등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타협안 도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양국 외무장관은 극동지방의 천연가스 개발 문제와 일본 해상자위대와 러시아 해군 사이의 합동 훈련은 물론 경제 관련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